

“청년 일자리 만들겠다더니”

법에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3% 규정하고 있으나 308곳 중 53곳 미준수 유성엽의원 “공공기관 6곳 중 1곳 미준수... 인력관리 제대로 시행해야”

청년 일자리가 시급하다고 외치면서, 정작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법에 정해진 청년 의무고용 비율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청년고용법) 상 청년고용 의무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308곳의 공공기관 중 53곳이 법규를 미준수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공공기관과 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유성엽 의원의실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2018년 청년 의무고용할당 공공기관별 준수여부' 자료를 살펴보면, 대한석탄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은행 등 총 53개 공공기관이 청년 의무고용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공공기관 6곳 중 1곳은 청년고용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기재부는 2017년 2월 발표한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에서 공공기관 정규직 정원의 5% 수준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청년인턴 경험자 중에서 채용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청년들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산하의 공공기관 6곳중 1곳은 법에 정해진 의무조차 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정부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진정 관심을 갖고 있다면, 공공기관 인력관리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평화는 만들어내는 것... 강한 국방력 믿고 ‘전쟁 불용’ 선언”

文 대통령, 대구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 참석... 군에 자부심 갖고 DMZ 비무장지대화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한반도에 사는 누구나 자자손손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우리 군의 강한 힘이 그 꿈을 지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강한 국방력을 가진 우리 군을 믿고 지난 유엔총회에서 전쟁 불용을 선언할 수 있었다”며 “비무장지대로부터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열어온 우리 군에 자부심을 갖고 비무장지대의 국제 평화지대화를 제안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고 JSA를 완전한 비무장 구역으로 만들 수 있었다”며 “오랜 세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국군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었던 것도,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남북 군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실천한 군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동등 지역에서 있었던 드론 공격의 위력이 보여줬듯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도전들도 과거와 다른 다양한 유형이 될 것”이라며 “미래의 전쟁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과의 ‘과화전’, ‘정보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래 전쟁의 승패도, 안보의 함도 혁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군은 언제나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혁신해왔으며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해 작전지휘의 효율성을 높였고,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사이버안보체계를 마련하고 무인전투체계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전력 체계를 혁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내년도 국방예산을 50조원 넘게 편성했다. 방위력 개선비는 지난 3년간 41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 도에도 16조7000여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더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방어체계, 신형잠수함과 경항모급 상륙함, 군사위성을 비롯한 최첨단 방위체계로 우리 군은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아들딸들이 입은 군복이 긍지와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다”며 “복무 중에도 개인의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국방의 의무가 사회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병장 기준 40만6000원인 봉급을 54만1000원으로 인상하고, 건강하게

복무하고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군 의료지원체계를 더욱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생활환경 개선, 육아 여건 보장, 성차별 해소를 비롯해 장병들의 삶 하나하나를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리 국군은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애국의 군대이며,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의 군대’다. 또한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앞장서는 ‘국민의 군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겠다.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겠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100년을 우리 군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뉴스

도의회 농산경위, 특례군 제도 법제화 방안 마련 위한 정책 토론회

전북도의회 농산경위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군 제도 법제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재정적 특례가 확대되고 있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郡) 지역에 대한 특례제도 법제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오늘 발제자로 나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진기 교수는 인구 및 교령화 추이, 재정자립도를 근거로 지방정부 간 및 동농 간 격차를 부각시키면서 심화되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대응으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시켜 대도시 특례와 시·군

통합 그리고 군 특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정토론회자로 참석한 전주대학교 오재록 교수는 “최근 10년간 시(市)지역 인구는 12.0%가 증가한 반면, 군(郡) 지역은 7.3%가 감소해 정부차원의 별도 대책이 없는 대부분 군(郡)지역이 지방소멸 대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례군 적용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연구원 이동기 박사는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인구밀도 40명 미만 등의 지역에 한정해 특례군의 법적 적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북의 경우 특례군의 범위에 포함될 시·군은 진안, 순창, 장수, 무주, 임실 등 5개 군이 포함되어 있어 어떤 형태든 별도의 재정적 지원, 균형특별회계상의 인정범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주상현 교수와 예원예술대학교 최낙관 교수도 마찬가지로 특례군 지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북 지역 농어촌 군지역의 미래 생존전략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특례군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북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용구 위원장(남원 2)은 “특례군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균형적 발전과 지역상생 및 지역협력 발전을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이며 현재 특례군의 법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특례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의 미래 위해 희망과 꿈이 결정되도록”

김항술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위원장 취임식 열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위원장(김항술) 취임식이 1일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을 비롯한 권애영 전남도당위원장 및 당원 수백명이 참석했다.

김항술 도당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 했지만 민주당 때문에 전북이 망했다”며, “이제 전북의 성공을 위해서는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과 함께 하는 것이 애항과 애국을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경제산업 정당으로서 산업 밑바탕에서부터 경제가 발전 했고 민주주의도 일어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가짜가 판을 치고 뉴스도 올바르게 나오지 않고 있다”며,

1일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에서 김항술 전북도당 도당위원장 취임식이 실시된 가운데 김항술 전북도당 위원장이 참석한 내빈과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압수수색에 대해 총리, 대통령까지 나서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으로 새만금개발을 임기 내에 약속하고서 결국은 태양광으로 새만금을 덮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은 도민들에게 정직한 정치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전북에 1석도 국회의원도 없는 현실을 중앙당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전북의 미래를 위해 희망과 꿈이 결정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조배숙 의원 “산통부 전북 산업위기 대책 생색내기에 그쳐”

자동차산업, 조선업의 붕괴로 전북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겪는 가운데 산통부 산통부 전북 산업위기 대책이 생색내기에 그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익산)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위기지역 지원대책의 사업, 예산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그간 산업부의 산업위기대책이 전북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간의 생색내기에 그친 나열

식 지원대책을 전면 수정하고 실제 투자와 수요를 창출하는 전북 맞춤형 지원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은 “군산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폐쇄되며 협력사들의 연쇄적인 폐업과 대량실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요와 투자를 창출하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제3회 전라북도 아리울 어버이합창 공연대회

2019. 10. 5(토) 오후 4:00
전라북도청 대공연장

- 주최: 전주매일신문, JJC지방자치TV전북총국
-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 후원: 전북도, 전주시